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33('23-11) | 2023. 11. 1

제대군인의 재취업과 한국형 민간군사기업(K-PMC) 역할
박상중

북한의 핵·경제병진 노선과 특수전력과의 병합적 관계
방호엽

의무 복무 제대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제언
이영석

제대군인의 재취업과 한국형 민간군사기업(K-PMC) 역할

박 상 중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국방대 교수)

들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의 총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초연결(Hyper-connected)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취업 기회도 심각한 위협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 제대군인들은 새로운 첨단기술에 대한 역량 부족과 나이 제한으로 취업의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가재원의 부족과 연계하여 여당과 야당 모두 군인연금 개혁의 재추진을 고려하고 있어서 제대군인의 재취업은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육군을 중심으로 제대군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 PMC)의 발전이 추진되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10여 년 전에도 제대군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PMC가 논의된 적이 있으나, 국가지도자와 군수뇌부의 관심소홀, 관련법령의 부재, 국가재원의 투입 부족 등으로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형 민간군사기업(Korea-Private Military Company,

K-PMC)'은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대군인 재취업의 어려움과 당위성을 살펴보고,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위한 K-PMC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대군인 재취업의 어려움

제대군인이 재취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다. 먼저, 군에서 획득한 기술이나 경험이 민간에서 직접 활용되지 못할 경우,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다. 둘째, 군대 특유의 조직문화가 민간 기업과 상이하여 원만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도발 위협, 고위험 임무, 지속적인 긴장과 불확실성 등에 노출된 군 복무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취업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넷째, 군대에서의 경력이 민간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 시장이 치열한 경우 경쟁에서 밀리기 쉽다. 다섯째, 군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경험이나 기술이 민간 기업에서 요구하는 경험이나 기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직업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여섯째, 군대 업무는 민간 기업의 근로 시간, 융통성 등과 달라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 복무로 인해 사회를 떠난 기간이 길어질수록 민간 취업 시장에서 경력 단절(Career Break)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국토방위를 헌신한 영웅, 제대군인이 직면하고 있는 재취업의 어려움은 남의 일이 아니다. 군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들도 제대군인들의 현실을 내 일처럼 보듬어서, 보다 나은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하루빨리 성숙되어야 한다.

제대군인 재취업의 당위성

제대군인의 재취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아름다운 젊음과 소중한 평생을 바친 영웅들을 위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게다가, 제대군인의 재취업은 군 복무를 통해 습득한 경험과 전문 기술을 민간의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하면 국가 경제와 개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제대군인은 재취업을 통해 생계유지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 둘째, 제대군인은 재취업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복귀와 적응이 수월하다. 일반적으로 정규적인 직장 활동은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제대군인은 재취업을 통해 군대에서 쌓은 노하우(Know-how)와 전문 기술을 민간에서 활용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넷째, 제대군인을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에 새로운 전문성이 유입되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제대군인 자

신이 가진 전문 기술과 역량을 민간에서 활용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삶의 만족도와 자신감도 향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대군인들은 군 복무를 통해 리더십, 팀워크, 스트레스 관리,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기술과 사건(Event)에 대한 민감성을 보유하고 된다. 이와 같은 제대군인의 특수한 경험을 민간 기업에서 적재적소에서 활용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대군인의 재취업은 제대군인의 개인적인 안정과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제대군인의 민간분야 재취업은 국가의 인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경제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번영을 도모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민간군사기업(PMC)의 발전

민간군사기업(PMC)은 일반적으로 군사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제대군인을 활용하여 군 업무를 아웃소싱(Outsourcing)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PMC는 제대군인들에게 군사적 경험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급여와 혜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등 제대군인들에게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취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초기의 PMC는 전쟁지역에서 전투 임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군사작전 지원, 보안 서비스 제공, 운송, 군사훈련, 군사컨설팅, 자원 개발 및 인프라 보호 등 비전투 분야에서 인도주의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군사선진국의 PMC는 초기의 국가재원의 부족에 추가하여 ①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적 충돌의 지속 등 군사적 분야뿐만 아니라, ③ 지진, 해일, 태풍, 가뭄 등 천재지변과 감염병, 경제적 불균형, 식량에너지 위기 등 신종안보위협, ④ 생명존중 사상의 확대와 문화사업의 발전에 따른 개인 및 사생활 보호 등 비군사적 분야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PMC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전투와 같은 군사작전에 직접 참여하거나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초래하여 국제적 규제와 정책, 감독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PMC는 제대군인들의 군사적 기술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안 서비스뿐만 아니라, 군사작전, 지휘관리 등 전문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분쟁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상적인 상황에서 회사나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대규모 행사나 이벤트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K-PMC 발전의 장애 요인 극복

국제적으로 PMC 업무영역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PMC 업무에 관한 국제적 규제와 투명성 확보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과거에는 PMC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었지만, 이라크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PMC가 전투 임무에 직접 개입하면서 인권 침해 등 윤리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 국가재원의 부족 등으로 PMC의 고위험 임무와 전투 임무는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PMC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업무 범위와 활동을 위해 국제적인 합의와 규제를 통해 엄격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고, PMC 업계 자체적으로도 임무의 투명성 확보와 윤리 교육 등의 자구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한국형 민간군사기업(K-PMC) 시장은 관련법규의 부재,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주요 K-PMC 업체로는 Bullet-K, LS Mtron Security, 레드플래닛, KGS, KH 등이 있다. K-PMC는 제대로 된 관련법령이 마련되지 못하여, 방위사업법과 국방개혁법이 PMC 활동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K-PMC 업체에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정원과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K-PMC 업체의 국방물류, VIP 경호, 보안 서비스 등을 포함한 사업 획득 경쟁력은 민간 대기업의 가격경쟁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으로 K-PMC 시장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서 제대군인들의 K-PMC 취업도 녹록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국회 국방위, 국방부, 육군본부 등이 K-PMC의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간에서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K-PMC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2010년 한국 대사관 경호와 민간인 보호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대형 건설현장 및 기업 경비, 민간인 보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K-PMC 업체들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현지에서 인명 구조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서는 대회장 내외에서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현재 K-PMC 업체는 국내에서 경찰·소방과 협업하여 경비와 안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과 연계하여 다양한 보안 서비스 제공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군사적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확대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K-PMC의 발전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적 여건을 반영하여 ① 관련 법령의 제정(신규 법령제정 또는 기존 법령 활용 등 고려), ② PMC 인증기준의 설정(인증기구 설치, 임무 수행 체계, 역량 평가 기준 등), ③ PMC 설립 및 자립 경영지원 방안 강구(컨설팅,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등이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있다.

K-PMC의 제대군인 재취업을 위한 역할과 향군의 K-PMC 진출 필요성

민간군사업체(PMC)는 제대군인들이 군대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민간직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먼저, 군사 전문성의 활

용 측면에서 PMC는 군대에서 획득한 군사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제대군인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게 하고, 특수 임무 및 위험 관리와 관련된 일자리를 제대군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군대에서 훈련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조할 수 있다. 둘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측면에서, PMC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과 군사적 경험을 민간에서 요구하는 기술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전문경력 관리와 진로 개발 측면에서 PMC는 제대군인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적절한 경력관리(Career Management) 컨설팅 및 멘토링을 통해 군에서 얻은 경험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찾도록 도울 수 있고, 군에서 배운 기술과 능력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직종에 연결해(Matching) 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및 정서적 지원 측면에서 PMC는 제대군인이 취업 이후에도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직장동료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소통과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K-PMC의 제대군인 재취업을 위한 역할은 제대군인들이 군대에서 체득한 전문기술과 지식(Know-how)를 활용하여 민간에서 성공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일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안보와 제대군인의 안정된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K-PMC는 제대군인을 위한 미래 먹거리이고, 향군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열 수 있는 블루오션(Blue Ocean)이다. 향군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면서 최대의 제대군인 공동체(Community of Veterans)이다. 현재가 군사적 전문성을 갖춘 제대군인들의 재취업을 위해 향군이 K-PMC 사업에 진출할 적기이다. 향군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K-PMC에서 경쟁이 아닌 독점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의 당연한 행복을 기대하며

제대군인의 재취업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대군인의 재취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K-PMC는 제대군인들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제대군인들은 K-PMC에서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려 취업할 기회를 열 수 있다.

국가방위를 위해 아름다운 젊음과 고결한 삶을 헌신한 영웅들의 제대 이후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기대한다.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과 특수전력과의 병합적 관계

방 호 엽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전.객원연구원)

(중국 산둥대 외래교수)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에는 여러 가지의 저의(底意)가 내포되어 있다. 이를 핵과 경제와의 병합적 관계를 살펴보면서 북한의 특수전력의 활용에 대한 연관성을 따져 보고자 한다. 러시아 특수전력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분리를 만들어 낸 사례로서 2014년 분쟁사례를 보면 먼저 국가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내전을 조장하여 군사적 혼란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정치적인 심리전을 실시한 가운데 특수부대를 이용한 은밀한 군사행동을 통해 공세적인 군사행동을 보장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보면 북한은 특수부대와 핵, 미사일, 사이버 등의 특수세력을 어떤 병합적인 관계로 한반도 상황에 적용할 것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분쟁에서도 ▲ 휴일 새벽 기습공격 ▲ 드론, 패러글라이더 등을 이용한 침투 양상 등이 북한의 비대칭 공격 양상과 유사하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어 한반도 상황에서도 투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핵·경제병진노선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일까?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보유국 획득과 핵미사일의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을 입증하려는 점을 보면 북한은 핵 공격의 마지막 부분(end-state)인 잠수함을 이용한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불시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려고 핵미사일 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만약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미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하는 능력을 완성하게 되면 미국 여론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국지전 상황의 전개 여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미국은 한미동맹의 구속력을 통해 직접적이며 신속하게 관여하는 점에 대해 과거와 같은 입장과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북한은 한미동맹을 와해하는 틈을 만들기 위해 여론 등을 이용하여 심리전을 시작하게 되고 이를 통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만드는 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이제는 자신들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핵 그림자 전략에 의해서 한국을 경제적 불모가 되는 여건을 만들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의 완성은 결국 과거 에치슨 라인의 재판(再版)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변화를 유도하는 핵심 의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특수부대의 사용 가능성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의 특수전력 활용성을 고려하여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향후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핵미사일 공격 능력이 완성되면 특수부대를 활용한 기습공격 상황을 만들어 내어 자신들의 경제력을 복원시키기 위한 예상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 북한의 선택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분석해 보았다. 북한은 핵 보유와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완비한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특수부대 전력 등의 비대칭적 수단을 이용하여 국지도발이나 테러, 사이버 등을 통해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정치·군사적인 상황을 조성하여 경제적 지원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 할 것이다. 이는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 진행하였던 병진노선의 과정과 결과에서 국방력 향상과 경제는 결코 양립하여 성공할 수 있는 병진노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정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사례와 같이 특수부대를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특수부대 등의 비대칭적인 도발 능력과 이에 대한 가능성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발 능력과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여 보면 전쟁이나 전쟁의 확전을 고려하는 방법보다는 도발이나 테러 등의 제한적 성격의 국지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한 대비 방향을 4가지의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핵·경제 병진노선(전략)에 대비한 전략적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된다. 둘째, 4세대 전쟁의 도발수단에 대비한 비대칭전력 능력을 강구해야 된다. 셋째, 정보수집 및 처리체계에 대한 체계성, 보장성, 그리고 협조성을 강구해야 된다. 넷째,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경제병진노선(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특수부대전력 등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적용 의도를 분쇄하고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의무 복무 제대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제언

이 영 석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한국의병연구소 소장)

지난 10월 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였다. 하마스 측은 공격 개시와 함께 20여분 동안에 로켓 5,000여 발을 발사하여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망 아이돔을 무력화시켰다. 또한 하마스는 로켓 공격과 동시에 무장대원들을 이스라엘 남부로 침투시켰으며 육지, 해상, 공중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심지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하여 공중 침투를 감행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대국민 성명을 통해 “오늘 상황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에 침투한 테러범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대규모 예비군 동원령도 하달하였다. 말 그대로 군사작전이 아닌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필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보도를 통해 가장 흥미를 느낀 것은 이스라엘의 예비군 제도이다. 이스라엘 남성들은 대체로 의무 복무기간이 2년 6개월이고 여자는 만 20세 이전까지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면제되고 그 외에는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이들은 의무 복무 후에는 바로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여성은 34세, 남성은 40~45세(병사 40세, 전투병과 장교 42세, 비전투병과 장교 45세)까지 예비군으로서 연간 38~55일 훈련을 받는다. 현재 이스라엘 예비군은 약 46만 명으로 현역(17만 명)의 2.5배 규모다. 이들 중 대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함께 발령된 예비군 소집은 약 30만 명이라고 한다.

예비군 소집령을 접하면서 필자가 더욱 놀란 것은, 예비군 소집 대상에서 벗어난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자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중국적자인 여자까지도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스라엘을 위해 기꺼이 동참한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도 안보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는 인식에 공감!

남과 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 한 국민의 입장에서 사실 부럽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스라엘 국민 못지않은 애국심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안심과 큰 위안을 갖는다. 지난 10월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혼인 여자 회사원은 “우리나라도 분단국가인데, 만약의 사태가 벌어지면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총 쏘는 법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을 보며 기본적인 군사 훈련은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강씨 뿐만이 아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속 잔혹한 공습과 납치, 인질 살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으면 좋겠다”는 말과 특히, “우리나라도 분단국가인데, 만약의 사태가 벌어지면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총 쏘는 법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미혼인 여자 회사원도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민간인 납치를 시작으로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관련 뉴스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대에 간다고 들었는데, 그들도 하마스의 납치를 피할 수 없는 걸 보고 더 큰 공포를 느꼈다”면서 “전쟁이 벌어지면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을 보며 기본적인 군사 훈련은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이에 대해 SM C&C ‘틸리언 프로’에 의뢰해 지난 13~17일 “건강한 여성은 약 4주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게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20~60대 남녀 3,009명이 응답했는데 44%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더 놀란 것은 30~40대부터는 기초 군사훈련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0%를 넘었고 50~60대는 여성의 기초 군사훈련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각각 56%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에도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스스로 자원입대하는 남녀가 상당수를 차지하리라고 본다. 다만 이러한 국민들의 애국심과 열정을 정부 정책과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대군인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과 연계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 복무를 통해 체득한 전투 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안보 자산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 제대군인들에 대한 전반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이 절실하다. 그러나 국가 예산의 제한으로 하루아침에 제대 군인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의무 복무자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부터 필요하다고 본다.

의무 복무자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제대군인을 위한 방안은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본다. 특히 의무 복무자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다.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 의무로만 여겼던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문제가 대두하면서 의무 복무 기간 때문에 겪어야 할 학업 중단, 사회경력의 단절, 취업 기회 상대적 불이익 등 의무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국가방위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아울러 제대군인들을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인력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성공

적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제대군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정책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대부분 중장기 복무자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의무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소홀한 편이다. 의무 복무자 제대군인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국민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군 의무 복무의 사회경쟁력 저하, 사회진출 지연,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의 순이라고 한다. 대략 의무 복무자 제대는 매년 부사관 4,000여 명과 병사 58,000여 명에 달한다. 따라서 의무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사회진입을 도우면서 안정적 사회 정착에 주안을 두고 추진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의무 복무자를 위한 제언

예전에 비해 군 복무의 여건도 많이 좋아졌다. 병사 월급을 포함하여 복지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으나 사회와 견주어 봤을 때 아직도 열악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장시간 일반 사회와 격리되고 통제된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요즘 신세대에 있어서는 엄청난 자기희생이다. 이런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군복무 가산점 부활이다. 1961년에 도입되었다가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서 폐지되었다. 앞으로 출산 저하로 인해 군복무 대상자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군복무 가산점에 버금가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의무 복무 전역자 지원정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지금은 국방부를 포함하여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급적 원스톱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의무 복무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행위에 자긍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운동선수를 포함한 병역 면제 대상자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넷째, 국가를 위해 기여하고 헌신한 자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예컨대 예비군 훈련 등 소집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원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획기적인 메리트를 주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스라엘처럼 국가 위기 스스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